

**보도자료**

보도일시	2013년 4월 29일(월) 13:30
담당자	김기완 KDI 산업·경쟁정책연구부장 (02-958-4746, kwkim@kdi.re.kr) 이경애 KDI 경영지원본부 전문연구원 (02-958-4106, leeka@kdi.re.kr)
배포일시	2013년 4월 29일(월) 11:00
배포부서	KDI 홍보팀(02-958-4030, press@kdi.re.kr)

## KDI 정책세미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

### - 발표 요약 -

- 일 시: 2013년 4월 29일(월) 13:30~18:30
- 장 소: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(3층)
- 주 최: KDI
- 후 원: 기획재정부·미래창조과학부

※ 세미나 발표 및 토론 내용은 개인의 의견이며, KDI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.

- KDI는 4월 29일 기획재정부, 미래창조과학부 후원으로 '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' 제하의 정책세미나를 개최,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'창조경제'의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모색
- 정책세미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,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, 김인철 한국경제학회 회장 겸 성균관대학교 교수 등 정책 당국자 및 산·학·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

- 정책세미나에서는 '창조경제 추진의 배경·의의·효과', '창조경제의 확산 전략', '창조경제의 기반 조성' 등 세 개 세션과 종합토론을 통해 창조경제 추진 의의 및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,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세부 전략을 모색할 것임.
- 특히 '창조경제의 확산 전략' 및 '창조경제의 기반 조성' 주제의 2, 3부에서는 '창조경제'의 핵심 이슈인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 융·복합 촉진, 대·중소기업 상생, 산업간 융합을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, 창의인재 육성 및 창조형 R&D, 벤처 활성화를 위한 자금 생태계 구축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

#### ◆ 첨부 1 프로그램

#### ◆ 첨부 2 발표 및 토론(일부) 요약

❖ **첨부 1. 프로그램**

시 간	일 정
13:30~13:45	등록
13:45~14:05	<b>개회식</b> <b>개회사</b> 김주훈 KDI 부원장(원장 직무대행) <b>축사</b>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
14:10~15:25	<b>제1부. 창조경제 추진의 배경, 의의, 효과</b> <b>사회</b> 김인철 성균관대학교 교수 겸 한국경제학회 회장 <b>발표 1. 창조경제 추진의 배경과 정책과제</b> 김기완 KDI 산업·경쟁정책연구부장 <b>발표 2. 창조경제 실현과 과학기술·ICT의 역할</b>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전략본부장 <b>토론</b> 반장식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이석우 (주)카카오 대표 주형환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
15:35~16:50	<b>제2부. 창조경제의 확산 전략</b> <b>사회</b> 윤창번 KAIST 교수 <b>발표 3. 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 융·복합 촉진 전략</b>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<b>발표 4. 대·중소기업 상생의 추진전략</b>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본부장 <b>발표 5. 산업간 융합을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</b> 김은환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<b>토론</b>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최원식 맥킨지 서울사무소 대표 현대원 서강대학교 교수

시 간	일 정
16:55~17:50	<b>제3부. 창조경제의 기반 조성</b> <b>사회</b>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<b>발표 6. 창의인재 육성 및 창조형 R&amp;D 추진방향</b> 김창경 한양대학교 교수 <b>발표 7. 벤처 활성화를 위한 자금 생태계 구축전략</b> 구분천 LB인베스트먼트 대표 <b>토론</b> 김병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배희숙 이나루티엔티 대표
17:55~18:30	<b>제4부. 종합토의</b> <b>사회</b> 김인철 성균관대학교 교수 겸 한국경제학회 회장 <b>패널토의</b> 김주형 LG 경제연구원장 김주훈 KDI 부원장(원장 직무대행)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윤창번 KAIST 교수

◆ 첨부2. 발표 및 토론 요약

## 제1부. 창조경제 추진의 배경, 의의, 효과

### 발표 1. 창조경제 추진의 배경과 정책과제

김기완 KDI 산업·경쟁정책연구부장

- 창조경제는 과학기술 및 ICT를 기반으로 산업·부문 간 융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음.
  - 현 정부의 창조경제론은 창조산업을 강조하는 기존 관점과 달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전반의 정책과제를 포괄함.
- 창조경제의 대두 배경으로는 잠재성장률 저하와 요소투입 의존 성장의 한계, 중소 제조업 및 서비스부문의 저생산성, 창업과 기업 성장을 위한 환경의 미흡 등을 들 수 있음.
-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는 사회적 인프라 조성, 과학기술·교육·문화 등의 기반 조성 및 혁신형 기업 창업·성장을 통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정립
  - 창조적 발상 촉진의 전제 조건은 ①창의성에 대한 보상체계 정립, ②공정한 기회 제공, ③사회적 신뢰 확보
  - 혁신형 기업은 위험의 공유와 융합을 통한 新사업 기회 창출 등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으며, 공정경쟁 기반 조성과 해외진출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

- 본 발표에서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①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, ②규제개혁, 융합 촉진 등을 통한 서비스산업 선진화, ③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체제 구축 등을 제시
  -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R&D 투자 효과 제고와 공공민간협력 강화 등 정책 전환, 산학연 협력의 실질적 활성화, 벤처생태계 확충 등이 요구됨.
  - 규제개혁, 융합 촉진 등을 통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칸막이 철폐를 통한 진입장벽 제거, 제조업과의 융합 촉진,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이 중요
  -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잠재력 있는 기업에의 집중, 공정거래 및 창업 기반 조성,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됨.

## 발표 2. 창조경제 실현과 과학기술·ICT의 역할

###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전략본부장

- 창조경제 구현의 중요한 수단인 과학기술과 ICT의 역할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.
  - 자체역량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선도 핵심 기반 역할
  - 창의적 아이디어 실현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매개 역할
  - 과학기술·ICT 융합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의 중추 역할
- 우리나라의 과학기술·ICT 현황을 살펴보면, 과학기술 성과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고 창의적 인재는 부족하며, ICT 분야의 하드웨어는 세계적 수준인 데 반해 S/W·콘텐츠 분야의 경쟁력은 취약
  -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창업 지원, 지식재산 평가·보호, 협력적 기업문화, R&D 성과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
  - 국가 R&D 사업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, 융합 신산업 창출 등 미래성장동력 발굴 부족
-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·ICT 역할의 강화 방안으로서,
  - 과학기술·ICT 역량 강화를 위해 창의적·도전적 R&D를 확대하고, S/W·콘텐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
  - 과학기술·ICT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산업 창출의 일련 과정을 통섭하는 생태계 창조형 R&D를 활성화하고,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

- 선진적인 지식재산 창출·보호·활용 생태계 조성 필요
-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과학기술·ICT 융합에 기반한 3가지 조건(기존 성과 계승, 고용창출 가능성, 산업생태계 형성)과 3가지 전략(수요 중심 전략, 전주기적 정책, 대응합 촉진과 인재양성)을 고려해야 함.
  - 이를 통해 주력산업 부가가치를 제고해 세계시장을 주도할 '시장 주도형', 과학기술·ICT 및 타 분야와의 대응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'신산업 창출형',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공공 구매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'공공서비스 개척형'의 3가지 유형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
  -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정부는 목적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설정하고 정부 R&D 투자 효율화를 추진해야 함.

## 제2부. 창조경제의 확산 전략

### 발표 3. 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 융·복합 촉진 전략

####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

-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산업 밖에 있는 잠재적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을 수월케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할 필요
-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과감하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되,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
  -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특정한 사항을 열거해 제한적으로 금지시키는 단순한 방식만으로는 불충분
  -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 효과를 가져 올 규제개혁, 즉 피규제자 또는 규제대상의 금지 요건을 완화해 충분한 진입자유를 확보해 주는 방향의 규제개혁이 바람직함.
- 창의적 아이디어와 융합을 통해 생성되는 새로운 산업 영역의 시장창출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해야 함.
  - 기존 산업의 영역을 대체하거나 잠식할 수 있는 이른바 '창조적 파괴'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 구축이 긴급
  - 다분야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창의성과 자율성,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한데, 특히 아이디어의 역할이 중요한 분야일수록 아이디어의 진입을 자유롭게 보장할 수 있어야 함.

- 창조경제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산업화 시대의 규제들, 특히 현존하는 진입규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
- 진입규제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적인 유지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
  - 현존하는 진입규제가 시의성을 유지하고 있는지, 규제의 목적이나 논거를 여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해야 함.
  - 각각의 규제별로 공공성의 명분, 규제의 합목적성과 정책의 우선순위 변화, 산업정책 및 경제상황의 변화, 기득권의 고착 여부 등을 재평가해야 함.
- 진입규제 소관부처들이 일관된 원칙에 의해 규제개혁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일한 양식을 제공
  - 양식에 따라 소관부처가 작성한 '평가서'를 일괄 취합,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진

## 발표 4. 대·중소기업 상생의 추진전략

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본부장

-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은 민간자율의 사회적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'공정한 사업영역 조성', '동반성장 및 공정거래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', '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협력 촉진', '동반성장 기반조성 및 문화 확산' 전략에 입각해 추진할 계획
- '공정한 사업영역 조성' 사업으로 제조업, 생계형 서비스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한데 이어, 금년에는 서비스업 분야 중 적합업종 확대방안을 검토
- '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' 사업으로 '동반성장지수' 평가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, 특히 중견기업 또한 평가대상으로 포함해 2차 협력기업으로의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할 계획
  - 납품대금확인시스템 도입, 1·2차 협력사 간 수탁기업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2·3차 협력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
- '동반성장 협력 촉진' 사업으로 협력 중소기업의 연구개발, 생산성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'동반성장 투자재원 조성' 사업의 출연기업 확대와 출연률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
- 동반성장백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, 공익광고 방영, 동반성장주간을 운영한 데 이어, 금년에는 '동반성장포럼 정례화' 및 '동반성장 아카데미'를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예정

## 발표 5. 산업 간 융합을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

김은환 삼성경제연구소 상무

- 새로운 산업혁명의 키워드로 인프라 산업이 부상
  - 신흥국 경제성장과 함께 세계 인프라 시장은 2030년 4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
  - 새로운 성장기회를 둘러싼 국가·기업 간 경쟁도 점점 더 치열
- 실제로 GE, 지멘스, IBM, 히타치 등 글로벌 기업은 물론 일본, 중국 등 국가 차원의 노력이 속속 가시화
  - GE, 지멘스 등은 자사가 보유한 다양한 사업들을 패키지화해 고객인 국가, 도시에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략을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
  - IBM, 히타치 등 IT 기반의 회사들은 최신 정보기술을 인프라에 접목한, 스마트 인프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.
  - 일본,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과 혼연일체가 되어 국가 차원의 인프라 수출 전략을 기획·추진 중임.
- 우리나라 역시 인프라 수출 부문에서 세계에 뒤지지 않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향후 글로벌 시장 성장과 고객 니즈의 고도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전략과 정부·기업 간 협력을 요구하고 있음.
  - 특히 신흥국들은 최근에 고성장을 달성한 한국경제의 저력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.
  - 한국 경제성장의 노하우를 접목, 신흥국에 가장 적합한 인프라를 先제안할 경우 단품 위주의 수주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창조적 사업 전개가 가능할 전망
- 향후, 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정부·기업 간, 이업종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## 토론

###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교수

- 경제학자에게 창조경제는 '창조'와 '경제' 두 단어의 연결이며, 그 의미는 '창조되는 것에서 반드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어야 한다'는 의미
- 경제학의 기본 대상으로서 경제활동은 투입 요소에서 산출물이 생산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, 투입요소의 비용 보다 더 많은 총가치가 산출되어야 함.
- 즉 경제활동에는 반드시 부가가치가 창출될 필요
- 더 많은 부가가치가 추가적인 고용을 창출할 수도 있고 창출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, 더 많은 부가가치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기업은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증가시키고 근로자의 소득도 증가
- 근로자의 생산성 증가로 시장이 확대되면 반드시 시설투자 또는 기존 시설의 최대 활용을 위한 고용이 창출됨.
- 전체 고용의 약 89%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은 그 중요성에 비해 한국경제의 경제변수에는 쉽게 포착되지 않는 숨어 있는 한국경제 구조의 핵심요소임.
- 한국의 중소기업 거래에서 대기업과의 거래는 63~68%를 차지
- '대·중소기업 상생경영'은 경제학의 존재이유인 창조경제의 논리를 기업 간 거래에서 실현하려는 노력임.
- 2005년부터 강조되어 온 상생협력은 경제의 기본원리인 투입요소와 산출물 성과요소를 결합한 패러다임이며 상생경영은 2006년부터 발표

-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의 상생경영 메커니즘에서 신제품 및 신재료 생산, 연구개발, 시장개척 등의 투입요소는 상생협력 파트너십이며 산출물은 상생협력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임.
- 이런 성과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된 1776년 이전까지를 지배한 서구 사회의 몽테뉴적 사고 및 자연법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단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중장기 과제
- 상생경영 패러다임의 가치를 인지해 지속적으로 실행해 온 기업은 '포스코'와 '동서발전'에 불과
- MB 정부가 2010년 9월 29일 시작한 동반성장은 단기간에 대·중소기업 협력을 파급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
- 삼성전자 등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대기업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한 결과 가시적 성과를 창출
- 그러나 동반성장에는 투입과 산출물 요소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패러다임이 부재
- 동반성장이 지속·확산하려면, 제로섬 게임에서 포지티브 게임의 창조경제와 공유가치(CSV)를 강조하는 상생경영으로 전환되어야 함.
- 창조경제가 성장과 고용을 동시에 창출하기 위해 시도되는 근혜노믹스의 경제정책의 핵심이라면, 상생경영은 창조경제 대상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임.

## 제3부. 창조경제의 기반조성

### 발표 6. 창의인재 육성 및 창조형 R&D 추진방향

김창경 한양대학교 교수

-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양 축으로 한 경제부흥을 천명하고,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과학기술과 IT 산업이 있다고 제시
  - IT 산업의 승자독식구조와 초우량 인재가 요구되는 S/W 산업의 속성상 창조경제의 상위 개념인 국민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IT 산업은 한계가 있음.
  - 글로벌 100대 패키지 소프트웨어 기업 중 한국기업은 전무하다는 사실로 볼 때 S/W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도 한계
- 정부는 10 : 90의 양극화 구도에서 어떻게 탈피하여 진정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야 하며, 이를 위한 ICT의 역할을 고민해야 함.
  - 국민은 국민의 정부, 참여정부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ICT 정책을 기대하고 있음.
  - 지난 정부의 IT 정책은 주로 인프라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나, 서비스 규제 기능이 같은 부처 내에 존재함에 따라 세계 시장 기술동향에 역행해 민간의 창의성이 억제되고 이로 인해 IT 핵심기반이 갈라파고스화 된 것도 부인하기 힘든 실정
  - 이번 정부에서 추구하는 IT 플랫폼 하에서의 창조경제 과학기술 정책은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립할 필요

- ICT는 개개인의 창의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며 창의력 있는 모든 주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도록 하는 운동장으로, 내용물을 아름답고 정치하게 조각하는 것이 과학기술임.
  - 창조경제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담보하려면 그 역할은 창조 R&D가 담당할 필요
- 창조 R&D는 거대과학 R&D와는 상이하며 기존의 완성된 기초·원천 과학기술 연구결과 및 플랫폼에 창의력을 가미, 시장 친화적 부가가치를 높여야 함.
  - 이를 산업화하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프로토타입(Prototype) 제작, 파일럿 플랜트 건설을 위한 시뮬레이션부터 마케팅, 세일즈 비용 절감에 이르기까지 ICT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.
- 순수기초연구에서도 창조연구가 가능
  - 창조경제의 근간인 인터넷은, 우주 생성의 신비를 밝히기 위해 건립된 유럽 입자가속기 연구소(CERN)에서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입자검출기 사이의 거리 탓에 실험 데이터 교환이 어려워 당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던 팀 버너스리가 만든 문서교환기술(1980년)
  - 즉 기초연구든 실용연구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상력이 가미되어 시장에서 통하는 것이 창조경제 시대의 창조연구
- 창의인재는 수·물·화·생을 통섭한 초우량인재와는 확연히 다름에도 과학계에서는 흔재되어 사용되어 옴.
  - 창의인재는 원리보다는 실습, 획일화된 커리큘럼보다는 프로젝트성 수업으로 길러져야 함에도 우리 공교육은 여전히 획일화된 교과과정을 고집
  -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 기기를 자유자재로 조작, 온 세상 지식·정보를 검색하고 SNS를 통해 집단지성으로 무장한 학생들에게 교과서 중심의 진도기반 수업은 어쩌면 한없이 지루

## 발표 7. 벤처 활성화를 위한 자금 생태계 구축전략

###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대표

□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는 (1)벤처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며, (2)원활하게 회수된 투자금이 재투자되는 회수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함.

#### □ 벤처투자활성화 관련

- 벤처투자 규모는 벤처의 Debt Financing의 1% 미만에 불과하며, GDP 대비 벤처투자비율도 낮은 수준
- 다행히 벤처투자는 3년 연속 1조원을 상회했고, 일반 인식과 달리 초기투자도 잘 이루어지고 있음.
  - 그러나 2012년 신규조합결성은 2004년 이후 최저인 7,477억원에 불과
  - 모태펀드 등 공적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크므로 민간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
- 벤처펀드를 포함한 비상장 주식형 펀드 투자 시 초기손실을 인식하는 회계제도 변화로 인해 보험사 등 일부 금융투자사들이 투자를 꺼리므로 회계기준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
- 연기금 투자 풀(pool)을 조성, 국민연금, 정책금융공사 등의 주요 출자와 맞추어 함께 펀드 조성
- 손실 발생 시 벤처캐피탈의 출자금을 우선 감액하는 우선손실충당제도로 인해,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은 리스크는 피하고 안전한 투자만 하려는 경향이 생기므로 외국에 없는 우선손실충당 요구는 없어야 함.
- 투자대상을 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

#### □ 회수시장 활성화 관련

- 회수시장이 활성화 되려면, 첫째, 코스닥 등 상장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, 둘째, M&A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야 함.
- 상장심사 강화 등의 이유로 코스닥 상장기업 수가 예년의 60~70개에서 2012년에는 22개로 감소
  - 과도하게 엄격히 적용됨으로써 기술기업을 발굴한다는 코스닥의 원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코스닥 심사를 완화할 필요
- 이미 추진키로 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(KONEX)도 조속히 개설하고 우선주 거래도 허용해야 함.
- 미국 벤처투자에서 M&A를 통한 회수 비중은 약 70%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%에 불과
  - R&D를 많이 하는 벤처기업을 M&A하는 경우 그 벤처기업의 R&D 비용만큼 인수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M&A를 활성화
- 벤처기업 매각 시에도 주식스왑의 경우 실제 주식 매각 시 가치 기준으로 과세해야 하나, 지금은 스왑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향후 주가가치가 하락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매각 기준으로 과세

## 토론

### 김병도 서울대학교 교수

#### □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견인할 핵심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

- 10년 후 우리경제 규모를 두 배로 성장시킬 기업은 현재의 대기업이 아님.
- 10년 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거대기업으로 성장할 벤처의 씨앗을 지금 뿌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일본의 저성장시대를 경험할 수도 있음.

#### □ 창조경제를 견인할 핵심 인재란 '똑똑하고 준비된 창업 전문 인력'을 의미하며, 국부 창출 효과가 큰 창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(1)대한민국 최고의 인재가 창업을 해야 하고, (2)체계화된 창업교육을 통해 이들이 철저한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.

#### □ 현재 대한민국 창업의 문제점은 생계형 소규모 창업은 많은 데 비해 국부 창출에 큰 기여를 할 '기업형' 창업은 거의 찾기 어렵다는 점

- 한 벤처투자 전문가는 “정부의 관심과 지원으로 창업에 투자할 돈은 넘쳐나지만 막상 투자할 만한 곳이 없고, 정부의 창업지원금을 생계유지 수단으로 삼는 벤처 창업가도 많다”는 점을 지적
- 똑똑한 인재는 창업을 기피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오랜 준비 없이 창업을 하기 때문에 실패 사례가 누적되고, 그 결과 국가 전체의 창업 의지가 저하

#### □ 창조경제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개혁해야 함.

- 우리나라는 모방·추격형 경제시대에 적합한 표준화된 교육을 받은 균질 인재를 대량으로 양성하고 있어, 선도 경제시대에 필요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.
- 그 결과 대학 졸업생 대부분은 안정적 직장만을 선호하고, 이를 위해 학점, 해외연수, 영어성적, 인턴십 등 스펙 관리로 과도한 시간을 낭비

#### □ 창조경제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,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'창조경영학과(가칭)'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

- 신설 창조경영학과는 입학생 선발 및 교과 과정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함.
- 예컨대, 교과성적 중심의 입시 전형을 탈피하고 도전정신, 창의성 등을 고려해 '기업형' 창업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해야 할 필요
- 이러한 대학입시의 변화는 중·고등학교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
- 이를 통해 똑똑한 학생이 창조경영학과에 입학할 것이고, 이들에게 4년 동안 '창조형' 창업전문교육을 제공해 준비된 창업을 한다면, 한국에서도 빌 게이츠나 마크 주커버그 같은 '스타 창업가'가 나올 것으로 기대

## 토론

###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

#### □ 창조인재의 정의

-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조인재로, 상상력과 아이디어 또는 전문지식+기획능력(표현능력)+끊임없는 도전의지(실천의지)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음.
- 창조인재는 현상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 나만의 가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인재

#### □ 창조인재의 유형과 육성방향

- 성장 정체기에 있는 기업에게는 '비즈니스 감각 있는 글로벌 인재'가 절대적으로 필요
-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재는 시장기획-연구개발-생산-마케팅·영업으로 이어지는 사업흐름에서 기획능력이 있는 사람과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소통능력이 있는 사람일 것임.
- '와해성 기술개발 국가인재'와 '시장가치를 더하는 인재'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구현
-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개발이 요구되며, 집념과 열정에 기반을 둔 인재만이 이러한 기술에 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음.

- '시장에 도전하는, 기업가 정신이 함양된 창업인재' 육성
- 우리나라 기술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기술 자체의 사업성 검증과 가치산정 불일치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며, 창업을 통해 기술의 가치와 사업성이 검증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이 중요

#### □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

- 채용문화의 변화: 반복적인 학습으로 창의성이 훼손되고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과도한 스펙 쌓기로 낭비되는 창조성을 복원하기 위해 스펙 위주 채용에서 능력주의 채용으로의 전환이 시급
- 지식거래가 산업이 될 수 있는 환경: 작은 아이디어도 거래될 수 있고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시장생태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.
- 창업과 M&A가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환경: 창업기업은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모델을 지향하며, 'M&A 시장'을 통해 성장정체기에 있는 주력산업의 사업모델과 결합되어 기존 산업의 성장요소로 작용하도록 지향
- 대기업의 비즈니스 의사결정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는 스피노프 창업 활성화
- 대기업의 의사결정 경직성이 미래 시장경쟁에서 도태 원인이 된 사례들을 볼 때, 대기업 내에서도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
- 특히 대기업 차원에서 스피노프 창업활동이 自社의 긍정적 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.

## 토론

---

### 배희숙 이나루티엔티 대표

- 정부가 국가 기간망 구축으로 ICT 강국의 초석을 다져왔으나, 이후 정부 간 이렇다 할 협업 체계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.
  
- 클라우드를 IT강국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
  
- 특히 플랫폼 기반의 국산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또한 함께 마련해야 함.